



[뉴스]
‘접었다 폈다’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 5G’ 출시
02



비용·인력부담 가중 中企 ‘회계피로’ 호소

2019 회계이슈

〈中〉내부회계관리제도

작년 비적정 38개사… 81% 증가
작은 기업일수록 제도 도입 미흡

올해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인증이 강화되면서 기업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은 여전히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업계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잘 갖춘 기업일수록 감사비용이 감소한다”며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내부회계관리 비적정, 2년 새 2배↑

5일 한국거래소와 회계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상장법인 중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비적정’ 검토의견을 받은 기업의 비중은 지난해 2.9%로 전년(2.0%) 대비 0.9%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1.5%와 비교하면 두배 가량 높아진 셈이다.

이 중 비적정 의견을 받은 코스닥 기업은 지난해 38개사로 전년(21개사)보다 대폭 늘어났다. 중소기업일수록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회사 스스로 갖춰야 할 내부통제 제도다.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췄는지, 회계 처리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지 등이 중요한 평가요소다.

지난해까지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외부감사인이 질문과 제한된 문서 정도를 확인하고 ‘검토’만 받으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신외감법 시행으로 상장사라면 의무적으로 내부회계관리에 대한 ‘감사’를 받게 됐다.

감사인의 인증 수준은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소극적 확신에서 “감사 결과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체계에 따라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적

극적 확신으로 높아졌다.

앞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대상은 늘어나게 된다. 올해는 직전사업 연도 기준 자산이 2조원 이상인 상장사가 대상이지만 2020년에는 5000억원 이상, 2023년에는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돼 모든 상장사가 감사를 받게 된다.

기업들은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회계 전문 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할애할 수 있는 업무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내부회계관리 잘할수록 감사비↓”

회계업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단기적으로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감사비 감소 등의 긍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은 흥의대학교 교수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취약하면 감사인이 통제 위험을 높게 평가해 감사투입시간을 늘리고 감사보수를 높게 청구한다”면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성에 따라 감사인의 대응행동(감사시간·감사보수)이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의 부담이 큰 기업의 경우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업무에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기업(직전사업연도 기준 자산이 2조원 이상인 상장사)은 전체 41.9%(52개사)로 나타났다.

허세봉 삼정 KPMG-K-SOX 전문조직 리더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도입 초기에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보완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상장사 회계 담당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를 위한 관련 교육을 이수한 비율은 절반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달 발간한 트렌트리포트에서 “올해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아야 하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 119곳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내부회계관리자의 교육 이수 비율이 45%로 집계됐다”고 지적했다.

최근 기자회견에서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소극적 확신에서 “감사 결과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체계에 따라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적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新〉외부감사법 및 동법 시행령 상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감사(위원회) 역할

평가 및 보고 의무

- 회사의 대표자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대면 보고 수령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대면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해당 회사 본점에 5년간 비치, 시정 의견이 있으면 이를 포함

평가의 방식

-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또는 검토 등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회사의 대표자에게 요청 가능

내부회계관리규정 제·개정

- 재부회계관리규정 제·개정 시 감사의 승인&이사회의 결의 또는 감사이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함
- 이 경우 감사(위원회)와 이사회는 승인 또는 결의의 이유 등을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관리하여야 함



문재인 대통령과 분남 보라지트 라오스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비엔티안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메콩 유역국가 협력 다지기’ 마침표 찍다

韓-라오스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중 아세안 10국을 전부 방문한 유일한 우리나라 대통령이 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5박6일간 동남아시아 3국을 ‘태국(공식 방문)-미얀마-라오스(국빈방문)’에 순차적으로 끝 디뎠다. 이는 문 대통령이 강조한 ‘임기 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순방 공약’을 이행하고, 오는 11월 말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및 ‘제1회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다.

〈관련기사 4면〉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라오스 랜드마크 메콩 리버사이드 호텔에 설치된 ‘대통령 순방 중앙기자실’에서 “태국·미얀마·라오스 3국 순방 결과 관련 아세안과 인도는 우리 경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전략적

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며 “제조업과 인프라 건설 등 전통적 협력분야 뿐만 아니라 ICT(정보통신기술), 바이오, 전기차 등 4차 산업혁명을 아우르는 첨단산업분야까지 상호 협력 여지도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마지막 방문지인 라오스는 우리나라 정상으로는 첫 국빈방문이다. 라오스 정부는 우리나라 정상 내외에게 최고의 예의를 표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비엔티안 와타이 국제공항에 도착하자 ▲양국정상간 인사교환, ▲양국 국가 연주, ▲의장대 사열, ▲양국 수행원 인사 교환 등 환영행사를 열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때 “라오스는 자원이 풍부하고, ‘아세안 물류허브’, ‘아세안의 배터리’로 불릴 정도로 성장 잠재력이 큰 나라”라면서 “여기에 분남 대통령의 ‘비전 2030’ 정책 및 ‘5개년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이 더해져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라오스 국가

발전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이 잘 조화해 양국의 공동번영을 이뤄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는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분남정부의 삼상정책·내륙연계국가정책을 연계해 ‘사람 중심 경제협력·상생 번영 공동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신남방정책은 우리나라 기준 남쪽에 위치한 아시아 주요국가들과의 경제·사회·정치적 협력을 모색하는 게 골자다. 라오스의 삼상정책은 주·군·마을 단위의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사업권한을 중앙부처에서 지역단위로 이양하는 게 핵심이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 종료 후 양국간 협력분야를 확대·강화하기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오는 2023년까지 5억불 규모) 지원 ▲농업 정책 공유 및 농업협력위원회 설치 등 총 4건의 정부 간·기관간 기본협약 및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라오스=우승준 기자 dn1114@

겉도는 산학협력… 취업연계 실의 없어 ‘외면’

IPP형 일학습병행제 이대로 괜찮나

〈上〉 ‘장기현장실습’ 폐지 수순

고용부, 올해 IPP 예산砍 지원 인원도 70명으로 축소

고용노동부가 기업과 대학의 일자리 연계를 위해 도입한 장기현장실습 제도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다. 올해 예산을 크게 줄이고 지원인원도 각 대학 100명에서 70명으로 축소했다.

고용노동부 장기현장실습제가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한국기술교육대(코리아텍)가 개발한 대표 산학협력 모델인 장기현장실습제(I-PP 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의 예산을 삭감했다. 이는 고용노동부

가 취업과 실질적으로 연계가 되지 않는 IPP에서 손을 빼려고 하는 작업으로 풀이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IPP형 일학습병행제’의 올해 예산은 약 200억이다. IPP형 일학습병행제는 ‘IPP’와 ‘일학습병행제’로 나뉜다. 그 중 장기현장실습제인 IPP의 올해 예산은 약 59억 2000만원.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집행 과정에서 IPP 예산을 약 12억 삭감하기로 하고 일학습병행제 위주의 예산 정책을 펼치기로 한 것.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 관계자는 “IPP를 시행하는 각 대학의 지원 명수를 100명에서 70명으로 줄였다”며 “(취업을 중시하는) 고용노동부와는 애초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했다.

실제로 고용부는 IPP를 폐지하기 위해 참여 기업과 인원의 수를 줄이는 쪽으로 유인하고 있다. ‘IPP형 일학습병

행제 추진 실적’에 따르면, 1기(13개교)의 참여인원과 참여기업은 각각 4902명, 2194개였던 것에 비해 2기(10개교)는 1978명, 987개, 이후 3기(9개교)는 811명, 365개까지 줄었다.

IPP형 일학습병행제는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IPP제도)’와 ‘일학습병행제’가 융합된 제도다. 대학과 기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장기훈련과정으로 청년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IPP제도는 천안에 위치한 한국기술교육대(코리아텍)가 2012년 국내 최초로 개발해, 운영·실시했다.

2개 트랙 형태로 운영하며, 학부에서는 자율적으로 2개 트랙 중 1개를 선택해 운영 가능하다. 기존 봄과 가을 2학기 학제를 4학기제로 변경하고, 3~4학년 중최대 2회(10개월) 장기현장실습제도를 운영하는 형태이다. 〈3면에 계속〉

/손현경 기자 son89@